

# 군사적 비관주의와 과잉억제의 극복: 북한 SLBM 위협 대응전략에 대한 재조명

김 정 섭\*

## ❖ 요약 ❖

북한의 SLBM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특단의 대응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SLBM이 기존 북핵 전략을 훼손시키고 한미동맹 자체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세적 작전개념 도입과 획기적인 대잠전 능력 증강 등이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 같은 기존 연구들의 SLBM 위협 평가와 대안 제시에 대해 비판적인 재조명을 시도한다. 기존 SLBM 위협평가가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대응전략이 과도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지나친 군사적 비관주의로 인해 대북 억제의 신뢰성을 우리 스스로 훼손시킬 수 있고, 공세적 대응이 자칫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 대한 재조명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기존 3축 전략의 무력화 문제, 둘째,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 셋째, 공세적 작전개념 도입의 적절성 문제 등이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SLBM을 포함한 북핵 위협에 대한 최선의 대응전략으로서 응징적 억제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대북 억제력 유지 못지않게 위기 불안정 통제가 핵심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복 위협을 통한 억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전략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핵심어: SLBM, 게임체인저, 3축체제, 확장억제, KAMD, 킬체인, 북한 핵위협

## I. 문제 제기: 북한 SLBM 위협은 게임체인저인가?

북한 SLBM 능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2014년 SLBM 탑재가 가능한 신포급 잠수함이 최초로 식별된 이후 지상과 수중 사출시험이 잇따라 실시되었고, 마침내 2016년에는 잠수함에서 발사한 북극성 1형 미사일의 비행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어 북한은 2019년에 3,000천 톤급 신포-C급 신행 잠수함을 공개했고, 이어 사거리가 증대된 북극성 3형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잠수함은 은밀성과

생존성이라는 특징을 갖춘 무기체계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파괴가 어려운 플랫폼으로부터 핵미사일이 날아온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우리의 북핵 대응 전략과 확장억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어떤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SLBM이 기존 북핵 전략을 훼손시키고 한미동맹 자체에 균열을 가져옴으로써 우리 안보의 근본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고 진단한다(박재완 2017; 박취락 2016; 반길주 2020). SLBM의 등장으로 인해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가 무기력해짐에 따라 우리군의 3축 전략에 허점이 생겼으며 확장억제의 신뢰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한 간에 ‘공포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핵 위협을 넘어 모든 군사적 대결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장악할 것으로 우려한다. 따라서 수중 킬체인 등 새로운 선제타격 개념과 능력을 구비해야 하고, 공세적인 대잠전 운용 개념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박재완 2017; 반길주 2020). 또한 이를 위해 잠수함 항내 대기, 임무구역 이동, SLBM 발사 이후 등 단계별로 탐지, 타격, 요격방어를 위한 전방위적인 전력증강을 제안하고 있다(배학영 2016; 이윤철·류해성 2018; 하태영 2017).

이 글은 이 같은 기존 연구들의 SLBM 위협 평가와 대안 제시에 대한 문제 제기다. SLBM 위협이 새로운 차원의 도전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SLBM으로 기존 한국의 핵·WMD 대응전략(3축 전략)이 무력화되고 확장억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진단이 맞는가? 둘째, 남북 간에 공포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북한의 핵 공갈과 국지도발 위협에 끌려 다니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셋째, 공세적 대잠작전과 전력증강 제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북한 SLBM 위협에 대한 최선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본 논문은 기존 SLBM 위협 평가가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대응 전략이 과도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SLBM이 던지는 군사·안보적 함의를 이해하되, 이로 인해 기존 핵전략이 무력화되고 판이 바뀌는 게임 체인저로까지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는 것이다. 지나친 군사적 비관주의로 인해 대북 억제의 신뢰성을 우리 스스로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위협평가에 기초하여 제시되는 공세적 작전개념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협성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북한 SLBM 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그 위협수준을 진단할 것이다. 둘째, 핵심 쟁점별로 기존 연구의 주장과 제언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살펴볼 쟁점은 세 가지로서 ① 기존 3축 전략의 무력화 문제, ②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남북관계 주도권 상실 여부, ③ 공세적 작전개념 도입의 적절성 문제 등이다. 셋째, 결론적으로 SLBM을 포함한 북핵 위협에 대한 최선의 대응전략으로서 응징적 억제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핵미사일 시대에 무엇이 최선의 억제전략인지는 항상 논쟁과 토론의 대상이다. 특히 억제 실패 시 군사적 대응능력을 강조하는 거부적 억제와 전략적 안정성에 역점을 두는 응징적 억제 전략 간의 대립은 냉전 시대 핵전략 논쟁의 중심 주제였다. 북한 SLBM 위협은 이제 한반도에서도 핵전략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관점과 논쟁, 그리고 균형 잡힌 인식이 필요함을 일깨우고 있다. 본 논문은 완벽한 방어에 대한 집착이나 선제 타격의 유혹에 굴복하기보다는 응징적 억제전략을 중심으로 북핵 위협이 관리되어야 함을 강조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대북 억제력 유지 못지않게 위기불안정 통제가 핵심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복 위협을 통한 억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전략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북한 SLBM 개발 현황 및 위협 수준 평가

북한이 SLBM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2014년 8월 미국 위성에 의해 북한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용 수직발사관이 식별됨으로써 공식 확인되었다(김보미 2019, 3). 이후 북한은 2014년 말부터 SLBM 사출시험을 본격 실시하기 시작했다. 육상과 해상에서 잇따라 성공적으로 사출시험을 시행하였고, 특히 2016년 8월 24일 신포급 잠수함에서 발사된 북극성 1형 미사일은 약 500km 비행 후 일본 방공식별구역 내에 낙하함으로써 북한 SLBM의 초기 운용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었다(반길주 2020, 122). 이어 2017년은 콜드론치(Cold Launch) 기술 시험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해라고 평가된다(반길주 2020, 122-123).<sup>1)</sup> 2017년

1) 콜드론치란 SLBM이 수직발사관을 빠져나와 수면으로 떠오른 후 공중에서 점화가 이루어지는 방

2월 북극성 1형 미사일의 지상형 개조 모델인 북극성 2형 미사일이 콜드론치 방식으로 시험 발사되었고, 7월에는 3차례에 걸쳐 콜드론치 사출시험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지던 2018년과 2019년 초반까지는 SLBM 개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지만, 다시 2019년 7월 23일 북한은 신포-C급 신형 잠수함을 전격 공개하였다. 기존 신포급 잠수함이 탄도미사일 1발을 장착할 수 있는 2천 톤급 규모인 것에 비해 이번에 공개된 신형 잠수함은 3천톤급 규모에 미사일을 3기까지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어 2019년 10월 2일엔 신형 고체연료 SLBM인 북극성-3형 미사일을 원산 인근 해상에서 발사했고, 가장 최근인 2020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SLBM인 북극성4-A형을 공개한 바 있다.

이상 SLBM 개발 동향을 고려할 때 북한의 SLBM 개발과 작전운용 수준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통상 SLBM의 기술 성숙도와 전력화는 5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알려져 있다. 즉, 1단계 지상사출, 2단계 수중사출, 3단계 초기비행, 그리고 4단계인 시험발사를 거쳐 마지막 5단계인 전력화 과정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문근식 2015, 28). 북한의 경우엔 이 중 4단계 수준에 거의 도달했다고 보는 전문가 평가가 많다(이윤철·류해성 2018, 86; 박재완 2017, 59). 2015년 이후 콜드론칭 방식의 사출 시험을 수차례 실시했고, 2016년에 북극성 1형, 2019년에는 북극성 3형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기 때문이다. 추진체 연료 측면에서도 초기 단계에서는 액체연료를 사용했으나 2016년 4월 시험발사 이후엔 고체연료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다만,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2017년 화성-12형(IRBM), 화성-14/15형(ICBM) 발사를 통해 재진입 기술도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있으나, 아직 기술적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반론도 유력하다(반길주 2020, 125).

다만, 작전적 운용능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모항을 벗어난 작전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원거리 수중항해를 할 만큼 기술적 정교함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김보미 2019, 9), 해저 지형에 대한 정보

---

식을 말한다. 반면에 미사일이 발사관내에서 점화된 후 발사되는 방식을 핫론치(Hot Launch)이라고 한다. 콜드론치는 핫론치에 비해 소음이 적고 설계구조가 간단하여 은폐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이윤철·류해성, 2018, 85).

부족으로 북한 영해를 벗어난 원거리 잠행이 부담스러울 것이란 예상이다(배학영 2016, 82). 여기에 북한 잠수함은 선체의 노후도가 심하고 주·부식, 수리부속, 연료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공간도 적어 군수지원을 담당하는 지원함 없이는 단독으로 장기 작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반길주 2020, 128). 또한 잠수함의 물리적 능력에서 파생되는 작전적 한계 외에도 실전적 훈련 부족에 따른 SLBM 운용 능력의 미흡함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다. 모든 첨단 무기체계가 그렇지만 잠수함의 경우에는 작은 기술적 결함과 운용적 미숙함이 큰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승조원에 대한 교육·훈련, 각종 시스템에 대한 반복적인 테스트, 통신과 지휘통제를 포함한 수상함대와의 합동 훈련 등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의 SLBM 개발 기술은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나, 실전 적용과 전력화 수준에 이를 정도의 안정성과 기술적 성숙도를 확보했는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Ⅲ. 한국군의 북핵 대응 전략 무력화 문제

#### 1.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와 킬체인 전략에 허점 발생 주장

북한 SLBM 능력이 고도화될 경우 기존 한국군의 군사적 대응 옵션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반길주 2020, 134). 우리군은 동맹의 능력을 활용하는 확장억제와 함께 한국군 자체의 억제·대응 개념인 ‘핵·WMD 대응체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SLBM 위협 하에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2)</sup> 먼저 KAMD의 문제다. 전방 감시와 하층방어로 고정되어 있는 현재 KAMD 체계로는 측·후방에서 고각 발사되어 날아오는 SLBM을 요격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린파인 조기경보 레이더는 북한의 지상 탄도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윤철·류해성 2018, 92).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 탑재되어 있는 SPY 레이더의 경우 전방위 추적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보유 척수가

2) ‘핵·WMD 대응체계’는 종전 ‘한국형 3축 체계’를 보완·발전시킨 것으로서 크게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전략적 타격체계’로 구분된다.

부족하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제약이 존재한다. 요격에서도 제한 사항이 발생한다. 하층방어체계인 PAC-3는 마하 7 정도 속도의 탄도미사일에는 대응할 수 있으나 고도 40km에서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는 KN-11을 요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구축 예정인 M-SAM, L-SAM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으며, 종말단계 상층 요격 시스템인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도 레이더 탐지각이 전방 120도로 한정되고 중력가속도가 붙는 빠른 미사일 요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하태영 2017, 82).

북한의 SLBM은 또한 ‘전략적 타격체계’, 즉 중전 3축 체계에서 ‘킬체인’이라고 불렸던 선제타격 개념을 무력화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킬체인(Kill-Chain)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명확할 경우 이를 선제적으로 타격하여 무력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킬체인의 시행을 위해서는 완벽한 감시정찰과 정밀 타격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SLBM은 바로 이 선제타격 개념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문제가 있다. 기지에 정박해 있는 잠수함은 감시가 가능하지만 일단 출항하여 잠항하면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는 것은 극히 어려워지기 때문이다(박휘락 2016, 98). 현재 우리군은 수상함의 능동·수동 소나(SONAR), 대잠헬기(Lynx, AW-159), 해상초계기(P-3)를 통해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고 있으나, 탐지거리, 장비 신뢰도, 보유 대수의 부족 등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윤철·류해성 2018, 90-91).

## 2. 대량응징보복 전략의 유효성

그러나 SLBM으로 인해 기존 한국군의 3축 전략이 무력화됐다는 평가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북한의 SLBM 능력이 전력화 단계에 이를 경우 실시간 감시·정찰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선제 정밀 타격이나 공중 요격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킬체인과 KAMD의 어려움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지상발사 미사일 위협 하에서도 이미 존재하는 문제였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800여기에 달하고, 여러 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더욱이 고정 표적이 아니라 200여대에 달하는 이동형 발사대(TEL)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형 표적이다. 핵탄두가 이중 어느 미사일에 탑재되어 발사될 것인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핵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를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정밀 타격하는 것은 처음부터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sup> KAMD도 마찬가지다. 800기에 달하는 지상발사 탄도탄 미사일을 애초부터 완벽하게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사일방어체계의 최저 요격 고도를 밀도는 저각 발사, 대구경방사포와의 섞어쓰기(배합공격), 동시교전 능력을 초과하는 동시다발 발사 등 북한이 KAMD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옵션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미사일방어는 공격자로 하여금 성공에 대한 일부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방어자에게는 반격작전의 여유를 확보하는 정도의 효용을 생각해야 현실적이다 (Roberts 2013, 10-11). 마치 완벽했던 미사일방어망이 SLBM으로 인해 구멍이 뚫렸다는 식의 해석은 정확한 인식이라고 볼 수 없다. SLBM의 대두로 미사일방어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KAMD가 달성할 수 있는 거부적 억제 목표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sup>4)</sup>

한편, 북핵 대응 전략의 세 번째 축인 대량응징보복은 킬체인이나 KAMD와 달리 SLBM 위협의 대두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미사일 방어와 선제타격 옵션이 SLBM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달리, 대량응징보복은 SLBM 위협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핵전략 요소다. 대량응징보복이 잠수함이나 SLBM이라는 해당 군사 표적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하는 사후적 응징 전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SLBM이 발사될 경우 정권 붕괴를 포함하여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응징이 따라온다는 점이 확실히 각인된다면 핵 억제는 성공한다. 따라서 SLBM의 등장으로 기존 북핵 대응 전략이 무력화되었다는 주장은 대량응징보복 옵션을 배제하고 킬체인과 KAMD 요소만 논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핵 억제는 원래 응징적 보복 전략이 기본이다. 미사일방어와 같은 거부적 억제도 효용이 있지만,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은 전략폭격기와 미사일 시대가 도래 하면서 이미 오래 전에 분명해진 사실이다(Freedman 1981, 5). 선제타격 옵션이 갖는 한계와 위협성도 이미 냉전시대 핵전략 논쟁에 있어 중심

3) 북한 핵무기 위치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에 선제 정밀공격 옵션이 본질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개념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2017년 북한이 기습적으로 ICBM 시험 발사했을 때, 미국이 그 징후를 사전에 포착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Sagan 2017, 77).

4) 다만, 거부적 억제는 군사적 효용성에서는 한계가 있으나 정치적 고려 면에서는 응징적 억제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적인 주제였다. 따라서 SLBM 위협이 대두되었다고 하여 지나친 비관과 극단적인 해결책에 빠지기보다는 핵전략의 고전적 수단인 대량응징보복 전략을 더욱 가다듬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김태형 2020, 337; Sagan 2017, 81-82).

대량응징보복, 즉 응징적 억제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한반도 군사력 균형의 성격 때문이다. 현재 남북 간에는 소위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인다. 양측 모두 제 2격 능력(second strike capabilities)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전면적인 군사행동을 시작하기 불가능한 구조 속에 살고 있음을 뜻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코피 전략(bloody nose strike)’뿐 아니라 1차 북핵 위기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정밀 타격론(surgical strike)’까지 북한에 대한 예방적 군사 옵션이 종종 검토된 바 있지만, 미국이 그때마다 결국 채택하지 못한 것은 북한의 보복 능력 때문이었다.<sup>5)</sup> 반대로 북한 역시 선제 행동을 통해서 한미의 보복능력을 일거에 무력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공포의 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지적 충돌이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 군사적 우위에 대한 집착과 경쟁 때문에 전략적 안정성이 도전받을 수도 있다.<sup>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에 쌍방 억제가 강력히 작동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이 군사적 대치 상태를 허무는 무모한 시도를 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고려한다면 SLBM 위협이 기존 한미의 북핵 대응전략을 무력화시킨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으로 보인다.

5) 클린턴 행정부 시절 당시 게리 럭(Gary Luck)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석달 이내에 사상자가 미군은 5만 2천명, 한국군은 49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Oberdorfer 1998, 315).

6) 냉전 시대에도 미소 양국은 공포의 균형을 수용하면서도 핵전쟁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와 핵 우위 추구를 멈춘 적은 없었다. 공포의 균형이 딛고 있는 취약한 기반에 대해서는 Wohlstetter(1959)를 참고할 것.

## IV.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남북관계 주도권 상실 문제

### 1. 한미동맹의 디커플링 및 안정-불안정 역설의 발생 문제

북한 SLBM이 미 본토를 위협하게 되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의 이완과 균열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있다(박휘락 2016, 99-100; 반길주 2020, 131). 냉전시대 미소 간에 상호확증파괴(MAD)의 관계가 성립되었듯이 북한의 SLBM 능력이 완성단계에 이르면 북미 간에도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미국의 대한반도 방위공약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반길주 2020, 132). 바로 냉전시대 서유럽인들이 걱정했던 ‘베를린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불안감이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 북한 SLBM 위협은 확장억제 신뢰성 약화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한미동맹의 균열과 와해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이 본토에 가해질 경우 그들의 대한반도 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지 않을 수 없고”(박휘락 2016, 100), 이 경우 한국에서는 미국의 방기(abandonment) 불안이 커지게 됨에 따라 “한미동맹이라는 제도적 메카니즘 자체가 뒤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반길주 2020, 132).

북한 SLBM 위협은 핵 억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도발 등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미국과 공포의 균형을 이룬 북한이 자유자재로 핵위협 카드를 일상화함으로써 대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것이다(반길주 2020, 134). 특히 핵 억제력을 과신한 북한이 각종 재래식 도발 카드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지적된다. 인도-파키스탄 관계에서 보여지는 소위 ‘안정-불안정 역설’이 한반도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한다. 인도가 파키스탄의 핵 보복이 두려워 파키스탄이 후원하는 무장 세력의 국경침입과 테러공격에 단호한 대응을 못한 바 있는데, 한국도 북한 핵 공갈에 인질 잡힐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북한이 서해 도서 공격을 통한 영토상 현상변경 시도 등 압박을 가해 올 때 우리의 선택지가 제약받고 양보를 강요당한다는 상황을 말한다. 또한 북한이 연합훈련 중단, 미 전략자산 전개 금지, 주한미군 철수 등 각종 강압 전략을 구사할 때 한미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양보의 압박이 커지리라

는 우려도 있다.

## 2. 확장억제의 본질과 냉전의 경험

먼저 북한 SLBM이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중국에는 한미동맹의 디커플링(decoupling)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디커플링이란 한미 양국의 입장이 벌어져 동맹의 균열이 발생한다는 뜻으로서 그만큼 SLBM이 동맹 메카니즘을 흔들 정도의 ‘게임 체인저’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본토가 보복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과연 일각의 걱정처럼 미국의 대한반도 공약이 유명무실해질 정도로 약화될 것인가? 미 본토에 대한 핵 보복 가능성으로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실제 미국의 대외 정책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냉전 시대 미국은 수천기의 소련 핵미사일의 사거리 안에 놓여 있었다. 뉴욕, 시카고, LA 할 것 없이 미 본토 전역이 소련의 핵 공격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심각하게 도전받았던 적은 없었다. 서유럽 나토 동맹국들이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긴 했지만, 소련이 핵전쟁의 위협을 무릅쓰고 미국의 반응을 시험해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많은 국내 연구자들이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 유사시 미 증원군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미국의 대한반도 방위공약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한다. 또한 평시에도 미국이 본토 핵보복 위협을 고려하여 대한반도 정책을 조정할 수 밖에 없어 한미동맹 자체에 균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수만 개의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보유했던 소련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았던 미국인데, 수십 기 핵무기를 가진 북한 위협에는 굴복한다는 시나리오는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브렌단 그린 2019, 70-71). 미국은 북한의 행동을 억제할 수 없는데 북한은 강압전략을 통해 초강대국 미국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다는 불균형한 가정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Morgan 2004, 7). 물론 불량국가로 치부하는 북한으로부터 본토가 위협받는 상황을 미국은 예민한 문제로 간주한다. 초강대국 사이의 미소 냉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위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약소국의 핵 공갈에 굴복하여 대외정책과 동맹관계 훼손을 용인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패배주의적이다(이근욱 2018, 344).

원래 확장억제에는 신뢰성 문제가 항상 따라 다닐 수밖에 없다. 아무리 동맹관계라 할지라도 위협인식이 서로 다르고 억제 공약이 제 3자의 약속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Schelling 1966, 36). 특히 후견국이 핵 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지킬 것인가라는 디커플링 우려는 너무도 당연하고 논리적인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확장억제라는 것이 NPT라는 불공정한 비확산 레짐을 유지하기 위한 P5 핵 강대국의 ‘정치적 수사(rhetoric)’에 불과하다는 견해까지 있을 정도이다(Lewis 2010, 1). 그러나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 독점이 깨진 1949년 이후 현재까지 확장억제 공약이 심각하게 손상 받거나 시험받은 일이 없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불확실해도 확장억제 공약은 핵 보복 위협을 뜻하며, 그 위협이 현실화될지 여부를 시험해 볼만큼 무모한 국가는 없었기 때문이다. 보복 위협이 확실하지 않아도 그 개연성만 충분하다면 원래 억제는 작동한다. 핵 보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만 있어도 억제는 깨지지 않는다는 뜻이다(Freedman 1981, 409-410). 북한도 자신의 핵 능력이 아무리 고도화 된다 할지라도 미국의 핵 보복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확장억제의 견고성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극단적인 회의를 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억제는 일종의 심리 작용이며 위협부담 경쟁이다. 우리가 확장억제의 약속에 불안해하고 대북 억제 효과를 의심할수록 스스로 확장억제를 허물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SLBM 대두로 확장억제 신뢰성에 결정적 문제가 생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확장억제 공약에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것은 핵우산 제공 국가가 핵 보복을 당할 위협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핵 위협 중 SLBM과 함께 ICBM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확보된다면 핵탄두 소형화나 사거리 면에서 많은 기술적 진전이 이루어진 ICBM이 미국에게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미국의 MD 장벽이 있지만 북한은 ICBM 대량생산이나 MaRV(Maneuvering Reentry Vehicle) 등 회피기술 강화를 통해 미 본토에 대한 제한적인 타격 능력이라도 갖추려 할 것이다. 이에 비해 SLBM은 시험 발사에는 성공했지만, 실전적인 잠수함 작전 운용 능력 면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수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새로운 잠수함 건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Elleman 2019). 특히 냉전시기 소련의 핵잠수함을 바렌츠 해 소련 해역에 묶어 놓았던 미국의 전략대잠전 능력을 고려할 때 시간이 흘러도 북한 잠수함이 미 해군의 감시망을 뚫고 서태평양을 건너 장시간 잠항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이유정·이근욱 2018, 21-24).<sup>7)</sup> 다시 말해 SLBM의 대두로 없었던 확장억제 신뢰성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며 ICBM에 비해 더 급박한 위협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뜻이다. 따라서 SLBM에 대해 기존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보기보다는 북핵 위협 대응에 또 다른 어려움을 부과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균형 잡힌 인식이라고 판단된다.

### 3. 북한의 핵 사용 문턱과 한국군 대응의 전략적 공간

북한의 핵 공갈과 재래식 도발에 한국이 무기력해진다는 우려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 핵무기의 힘은 원래 강압이 아니라 억제에 있다. 즉, 상대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 효과는 큰 반면, 상대에게 행동을 강요해서 이득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Sechser and Fuhrmann 2017, 59). 이것은 응징 위협(deterrence)에 비해 공갈 위협(compellence)의 신뢰성이 그만큼 높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영토분쟁에 있어 핵무기의 강압 효과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sup>8)</sup> 한편, 핵무기의 강압 효과는 북한이 얼마나 공세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와도 관련이 있다. 즉, 북한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핵 사용을 결심할 것인지, 그 임계점이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만약 북한의 핵 사용 문턱이 매우 낮다면 우리는 극도로 조심할 수 밖에 없다. 조금만 강력하게 대응해도 북한의 핵 보복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sup>9)</sup> 반대로 북한의 핵 사용 문턱이 높다면 핵무기는 최후의 수단으로 유보되

7) 미 해군은 해양감시와 수중감청을 통해 소련 잠수함(SSBN)의 위치에 대해 일일보고서를 생산할 정도로 추적·감시에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다. 냉전 당시 미국의 대잠작전(ASW)에 대해서는 Green and Long(2017, 47-51)과 Lieber and Press(2017, 35-37)을 참고할 것.

8) 핵무기가 억제 용도로는 유용하지만 강압 효과 측면에서는 제한적임을 분석한 연구로는 Sechser and Fuhrmann(2017)가 있다. 강압 전략의 대표적 수단인 전략폭격(strategic bombing)이 실제 전쟁 사례에서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연구로는 Pape(1996)을 참고할 것.

9) 재래식 전쟁이 핵전쟁으로 확장될 위험성에 대한 분석은 Posen(1991)을 참고할 것.

어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만 사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때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 사용을 결심하는 한계선은 어디라고 보아야 할까? 우리는 북한의 공세적이고 모험주의적인 행동을 염려하지만, 정권 생존이 지상과제인 북한 입장에서는 전면전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핵무기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할 것이다(Morgan 2004, 16). 핵 선제사용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지도부 제거의 위협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미군의 침공 저지 또는 전장 상황의 역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느끼는 상황에 한정될 것이다. 또는 북한 핵 전력의 생존성이 위태로워지면 핵 능력이 완전히 무력화되기 전에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Feaver 1992/93, 165).<sup>10)</sup> 다시 말해 북한 입장에서 핵 사용은 정권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결정이니만큼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는 한 가볍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며, 따라서 저강도 분쟁에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입장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과잉 대응은 삼가야 하겠지만 북한 핵 공갈에 위축되어 국지적 도발에 무기력하게 양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핵 공갈을 과대평가하면서 우리의 선택권을 스스로 속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비례성에 입각한 단호한 대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면서 대군사공격 전략을 너무 공세적으로 펼치게 되면 북한의 핵 사용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04년 파키스탄은 인도가 ‘콜드 스타트(Cold Start)’라는 공세적인 doktrin을 발표하자 핵무기 사용 임계점을 즉각 하향 조정할 바 있다. 인도의 신 군사doktrin에 대응하여 저위력 핵탄두 등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고 전술핵무기의 조기 사용을 위협한 것이다.<sup>11)</sup> 북한도 한미가 공세적 대잠작전 등 자신의 핵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할 경우 핵 태세를 좀

10) 북한이 핵 사용을 결심하는 핵 사용 임계점과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는 김태현(2016), 함형필(2009), O'Neil(2017), Jackson(2019) 등을 참고할 것.

11) 대군사목표(counterforce) 공격의 유혹과 충동에 빠질 경우 억지안정(deterrence stability)이 손상 받는다는 점을 인도-파키스탄 분쟁을 통해 깊이 있게 분석한 사례로는 김태형(2019)의 연구가 있다.

더 공세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핵 지휘통제(command and control)가 취약한 북한으로서는 위기가 고조될 경우 핵 사용의 즉응성 보장을 위해 핵 사용권한 위임의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Kim 2020, 57; O'Neill 2014, 8-17). 이렇게 되면 인도가 파키스탄의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듯이 우리도 재래식 국지적 충돌에서 훨씬 더 큰 위험을 안고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 V. 대북 공세적 작전운용 개념 도입의 적절성 문제

### 1. 대북 선제 타격 개념 도입 및 전력증강 강구 제언

앞서 살폈듯이 북한 SLBM 위협의 등장으로 한국군의 기존 3축 전력이 무력화되고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가에 기반하여 대응 전략들도 활발히 제안되고 있는데, 대부분 공세적인 작전운용 개념 도입과 적극적인 대잠작전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는 ‘거부적 해상억제 3단계 작전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반길주 2020, 136-138). 북한 SLBM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간 억제와 방어에 중점을 두어 왔던 한국군의 전략개념을 일대 혁신하여 작전운용에 공세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1단계로 항구 봉쇄 작전을 통해 북한 잠수함의 출항 자체를 방해하고, 2단계로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잠항한 잠수함을 추적·감시하고 필요시 부상 강요와 격침을 시행하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진화된 한국형 3축체계를 가동한다는 개념이다. 다른 연구들의 제언도 대동소이하다. 북한 잠수함이 정박, 출항, 잠항하는 작전 이동 단계별로 북한 잠수함의 활동을 거부하거나 필요시 격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잠 작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선제타격 개념이다. 북한 잠수함에서 SLBM 발사 첩보가 있을 경우 선제타격을 한다거나(반길주 2020, 136), 위기 시에는 기지 출항의 움직임만 보여도 잠항 이전에 잠수함을 선제 강습해야 한다는 주장을 말한다(하태영 2017, 89).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옵션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한국도 선제타격과

잠수작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박재완 2017, 67-68). 또한 잠수함 수중 접촉 시 부상을 강요하거나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화 할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으며, 간헐적인 폭뢰 폭발로 북한 잠수함을 퇴거시키는 대잠거부 작전도 주문하고 있다(박휘락 2016, 108; 반길주 2020, 137). 아울러 연구자에 따라 그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수중 킬체인’도 제안되고 있다. 즉, 잠수함 운용 단계별 무력화와 SLBM 공중 요격 능력이 필요하며(박재완 2017, 63-64), 수중자료 수집 및 공유, 통신, 실시간 계획, 정밀 교전 등 대잠전 체계를 전체적으로 혁신적으로 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반길주 2020, 137-138).

위와 같은 공세적인 작전운용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전력건설이 필수적이다. 먼저 잠수함 항내 대기단계에서 감시 및 공격을 위해 감시정찰 자산과 타격체계 보강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 해군의 트라이톤(MQ-4) 수준의 무인항공기, 미국의 조기경보위성과 유사한 고고도 정지궤도 위성 확보를 말한다. 또한 항내대기 시 적시성 있는 타격을 위해 순항미사일의 비행속도 개선과 P-3와 같은 해상 공중플랫폼에서 발사 가능한 정밀유도 폭탄(SLAM-ER, 타우르스 등) 확보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배학영 2016, 90-91). 현재 현무-3과 해성-2와 같은 크루즈 미사일이 정확도는 높지만 아음속이라는 한계가 있고, 현무-2B 탄도미사일의 경우엔 궤도에 저장되어 있어 준비시간이 과다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 잠수함이 출항하여 잠항에 들어갈 경우 이를 추적·감시할 수 있는 대잠작전 능력 강화도 강조되고 있다. 수상함의 음탐능력 개선, 대잠항공전력 확충, 잠수함전력 증강 등을 말한다. 수상함의 경우 작전요구능력(ROC) 설정시 대잠전 능력을 가장 우선시하여 저주파 고출력 HMS(선체 고정형 음탐기), 능동 TASS(예인형 음탐기) 등 중장거리 탐지능력 확보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이윤철·류해성 2018, 95). 또한 동서남해 전역에 대한 24시간 해상·대잠초계를 위해 항공 전력의 보강도 강조되고 있다. 스노클 잠수함 탐지를 위한 저고도 탐색전술을 실시할 경우 초계 가능 구역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여 P-3C와 P-8A 해상초계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2)</sup>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도입이다. 현재

12) P-8A 해상초계기는 2023년까지 6대를 획득할 계획이나 이 정도 수량으로는 북한 SLBM 잠수함을 전방위로 감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반길주 2020, 139), 현재 보유중인 P-3C도 최소 40~50% 정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한다(이윤철·류해성 2018, 96).

한국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으로는 SLBM 탑재 북한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핵추진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은밀성과 장거리 잠항능력이다. 핵추진잠수함은 축전기 충전을 위한 스노클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항공기나 수상함에 의해 피탐될 가능성이 낮다. 또한 20~30노트의 기동성이 있어 피탐 시에도 상대의 추적을 신속히 따돌릴 수 있으며, 넓은 탑재공간으로 많은 양의 어뢰, 기뢰, 잠대함·잠대지 미사일을 무장할 수 있다는 이점도 강조되고 있다(이윤철·류해성 2018, 98).

한편 SLBM이 실제 발사됐을 경우 이를 요격하는 미사일방어 능력도 문제가 된다. 고각발사의 가능성이 높은 SLBM은 수직낙하로 인해 가속도 변화량이 크고 레이더 반사단면적(RCS: Rader Cross Section)이 매우 작기 때문에 종말단계 하층방어에 치중되어 있는 현재 KAMD 체계에서는 요격이 어렵기 때문이다(박재완 2017, 67). 따라서 중간단계 요격이 가능한 해상기반의 SM-3가 북한 SLBM에 대응하기에는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해군 군 구조와 전력을 좀 더 기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강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현재 3개 해역함대와 1개 기동전단으로 구성된 우리 해군 체제에 2개의 기동전단을 추가하여 최소한 접적 해역별로 1개의 기동전단이 능동적으로 북핵 미사일을 탐지, 추적, 파괴,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하태영 2017, 93).

## 2. 공세적 작전운용 개념의 부작용과 위험성

북한 SLBM 위협에 대해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공세적 대잠작전과 선제타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LBM이 제기하는 군사적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작전적 측면의 교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선제 타격론은 북한의 공격에 앞서 한국이 먼저 군사행동을 한다는 것으로서 억제와 방어에 충실해 왔던 기존의 전략을 뛰어넘는 발상이다. 재래식 미사일도 아닌 핵 장착 미사일에 대해서 일단 공격을 받은 후에 사후 반격한다는 전략개념에 안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만큼 북한 핵 위협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타격을 포함한 이 같은 공세적 대잠작전 구상은 부정적 측면이 크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세적 대잠작전 능력 구축의 효과 측면이다. 기존 연구들은 공세적 작전운용 개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전력증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잠전에 직접 필요한 대잠헬기 확충, 수상함의 음탐능력 개선,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물론 SLBM 요격이나 선제타격을 위한 중층방어용 SM-3 미사일 도입, 정밀도와 적응성을 갖춘 해상 또는 공중 기반 유도탄 확보 등 실로 요구되는 전력증강 소요가 막대하다. 여기에 연구자에 따라 기동전단 확충 등 해군 군구조의 변화까지 제안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전력증강을 추진한다고 해도 SLBM 위협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는 점이다. SLBM이 위협적인 이유는 은밀성과 생존성 때문이다. 그런데 제안된 전력증강들은 잠수함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속성인 그 은밀성과 생존성을 감소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잠전 능력을 향상시켜 북한 잠수함의 작전적 융통성을 제한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과도한 목표와 전력 증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정된 자원으로 국방력에 투자할 때는 비용 대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작전적으로도 대잠전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한정된 우리군의 전력이 묶이게 되고 북한으로부터 역이용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반길주 134). 또한 공세적인 대잠작전 운용 개념 도입과 전력 증강은 부정적인 북한의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미가 대군사 목표(counterforce)에 집중하면서 북한의 핵 전력을 무력화하는 군사적 노력을 계속 한다면 북한으로서도 핵 무력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Mount and Rapp-Hooper 2020, 41).

둘째, 선제타격론이 갖는 위험요소와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선제타격론이 안고 있는 무모함과 비합리성이다. 잠항 이전에 잠수함을 선제 강습한다던지 수중 킬체인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있지만, 문제는 해당 목표물만 타격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핵 국가를 선제공격 할 때는 상대국 핵 전력을 일거에 무력화해야 핵 보복을 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 SLBM 한두 척이 문제가 아니라 지상에 은닉·분산 배치되어 있는 지상발사 핵미사일도 한꺼번에 선제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북한의 핵 능력을 100% 무력화시킬 자신도 없으면서 선제타격을 한다는 것은 핵 보복을 당해도 좋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sup>13)</sup>

13) 이런 측면에서 대북 군사옵션(선제/예방 타격 또는 참수작전)은 '대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도박

선제타격론이 갖는 또 다른 문제점은 징후판단에 대한 오판 가능성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때 선제타격을 한다고 하지만, 징후가 명확한 경우라는 가정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선제타격이 검토되는 상황이라면 평온한 평시가 아니라 국지적 충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한반도 군사위기가 위험수준으로 고조된 상황일 것이다. 이때 북한에 이상 징후가 보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동형 발사대가 움직이고, 북한군 지휘부와 부대 간 교신이 활발해 진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극도로 고조된 위기 상황에서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신포항을 떠나 잠항에 들어가려 한다면 이는 무슨 신호인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남한에 발사하기로 결심하고 준비 중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위기 상황에서 북한도 나름의 대비태세를 격상하고 있는 것일까? 북한 내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 않는 한, 청진기를 대고 속마음을 듣지 않는 한 징후는 징후일 뿐 결국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만약 북한이 핵공격을 결심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이를 잘못 판단하여 선제타격을 감행한다면 그토록 예방하려 했던 핵전쟁을 우리가 촉발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김정섭 2015, 24).

마지막으로 선제타격론은 위기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이는 선제공격이 유발하는 상호공포의 연쇄효과 때문이다(Snyder 1961, 104). 애초에 선제공격의 의도가 없는 국가(A)라도 상대방(B)이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도 선제공격의 압박을 느끼고, 이런 A의 움직임을 주시한 B는 더욱 강하게 선제공격 옵션에 매달리게 되는 악순환 과정을 말한다. 상대방의 선언정책과 군사태세에 대한 관찰을 통해 적대적인 양 당사국은 서로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점점 더 큰 선제공격의 동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평상시부터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선제타격론은 위기 시에 특히 위험하다. 전략폭격기, 항모와 같은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대거 배치되고 잠수작전이 공공연히 거론되기 시작하면 북한은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중앙집권적 핵무기 지휘통제를 취하고 있을 북한의 경우 선제타격 및 잠수작전에 특히 취약하다. 핵무기가 사용되지도 못하고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취약성 때문에 핵 사용 결정이 빨라지고 극단적 행동의 가능성

---

(a gamble of epic proportions)'이라는 비판이 있다. 제한적인 타격도 북한으로서는 전면적인 침공의 전조로 받아들일 것이며, 북한이 핵미사일로 보복할 경우 한미의 미사일 방어망이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다(Sagan 2017, 78-79).

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use it or lose it dilemma). 반대로 북한이 핵무기 분산배치, 미사일에 핵탄두 장착, 지역사령관에게 발사권한 사전 위임 등을 취한다면 한미는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북한의 핵 사용이 임박했다고 보는 한국으로서는 킬체인을 더욱 빠르게 작동시켜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이근욱 2020, 47). 위기가 고조되면 일정한 군사대비태세 격상과 억제조치 강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상대에게는 그것이 방어적 차원인지 공격의 준비인지 분명치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특히, 잠수함의 경우엔 더 심각하고 특별한 위기불안정의 위험이 존재한다. 통상 핵잠수함 운용에는 ‘요새 모델(bastion model)’과 ‘지속적 억제 순찰 모델(continuous-deterrent patrol model)’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Narang and Panda 2017, 4). 요새 모델은 구소련이 하던 방식으로 위기 전까지는 잠수함을 기지 근처에 두고 운용하는 방식이고, 지속적 억제 순찰 모델은 미국과 영국처럼 평시부터 계속해서 잠항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북한의 경우엔 잠수함 척수가 부족하고 운용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새 모델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기가 고조되면 기지를 멀리 떠나 잠항하면서 억제 순찰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멀리 바다 밑의 잠수함에 대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휘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북한의 통신기술 수준을 볼 때 장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명목상 소위 ‘2~3인 원칙’이 있어서 복수의 요원이 동의해야 SLBM이 발사되는 절차적 통제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LBM은 잠수함 함 내에 위치하고 함장과 승조원의 통제 하에 있다는 특성이 있다(Narang and Panda 2017, 4). 특히, 지상 발사 미사일은 통상 핵탄두와 발사체가 분리되어 있고 관리책임이 분산되어 있지만, SLBM의 경우엔 핵탄두가 장착된 상태로 잠수함 내부에 실려 있다는 차이도 있다. 훈련과 경험이 부족한 잠수함 승조원이 위기 시 한미의 공세적 대잠전에 쫓기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더욱이 상부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지 않다면 선제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따라서 징후 포착 시 선제타격이라는 일용 당연해 보이는 접근이 의도하지 않은 재앙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VI. 결론: 응징억제에 기초한 북핵 위협의 안정적 관리

북한의 SLBM은 새로운 도전이고 실제적인 위협이다. 지상기반 미사일에 비해 은밀성, 생존성이 뛰어나 사전에 이를 무력화하거나 방어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군사적 대응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넘어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된다. 북한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출 경우 미국의 핵우산 공약이 약화되고 한미동맹이 균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있다. 이런 관점에서 SLBM 위협을 게임 체인저로 인식하고 공세적 작전개념 도입과 획기적인 대잠전 능력 증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SLBM 위협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며 어떤 대응책이 최선일까에 대해서는 좀 더 균형 잡힌 시각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 살폈듯이 선제타격 개념을 포함하는 공세적 대잠전은 부작용과 위험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대잠전 능력, 미사일 방어의 신뢰도 등은 꾸준히 향상시켜야 할 우리군의 과제지만, 이런 거부적 억제 조치들은 그 효용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즉, 공세적 대잠전과 미사일방어에 대한 의존 전략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재정적으로 출혈이 심하며, 위기 불안정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SLBM 위협, 더 나아가 북핵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 어떻게 해야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핵 사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방지하고 핵 공갈 위협을 차단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을 통한 이득이 없음을 주지시켜야 하고, 둘째, 한미가 북한의 핵 사용을 압박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북한에게 핵 사용 또는 위협을 통한 군사·외교적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하며, 동시에 정권 붕괴나 전면전 패배 임박 등 북한의 핵 사용 임계점에 도달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종의 균형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 공갈을 방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야 하되, 북한에게 최소한의 안전감은 허용해야 함을 뜻한다(Kim and Warden 2020, 33-34). 현재 한미의 압도적인 군사능력을 고려할 때 첫 번째 과제는 그렇게 어려운 목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Mount and Rapp-Hooper 2020, 40). 최종적인 군사적 승리는 물론이고 위기가 고조되는 단계에서 상황을 주도하는 확전지배

(escalation dominance)도 한미 동맹이 우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Campbell and Dodge 2020, 55; Sagan 2017, 81-82). 확장억제에 대해서도 냉전시대 소련도 하지 못했던 미국과 서유럽 간 디커플링을 북한이 한미동맹에 대해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판단된다.

문제는 두 번째 과제다. 위기가 위험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을 때 한미가 단호한 가운데서도 위기 불안정을 차단하며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가는 생각보다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 없다(Kim 2020, 68-69). 특히 위기 안정성 문제는 평소부터 군사전략과 태세를 어떻게 정비하고 준비할 것인가 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대북 군사 옵션 폐기, 참수작전 개념 불채택 등이 이런 맥락에서 제기되는 주장들이다(Narang and Panda 2020, 51; Sagan 2017, 82). 이러한 방안들은 기술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끊임없는 군비경쟁을 낳고 위기 시에 특히 위험하기 때문이다.<sup>14)</sup> 따라서 한국의 핵·WMD 전략도 응징적 억제를 중심으로 꾸준히 그 능력과 태세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에 매몰되어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방안을 좇기보다는 사후적인 보복위협에 중점을 두는 응징 억제전략이 위기관리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핵미사일을 방어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핵 공격을 사전에 무력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은 너무 당연하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능력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요청 역시 뿌리치기 어려운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두려움과 유혹에 의존해서 전략을 수립할 수는 없다. 핵미사일 시대엔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 선제공격의 가능성이야말로 전략적 안정을 해친다는 자각은 이미 냉전 시대 핵전략 논쟁을 통해 얻은 교훈이다(Freedman 1981, 44). 응징적 억제, 즉 사후 보복 위협에 기초한 평화라는 관념이 일부 불완전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억제전략으로 받아들여졌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는 냉전시대 NATO와 비교할 때 유리한 점이 있다. 바로 한미동맹이 북한에 비해 재래식, 핵 전력을 막론하고 압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위기 상황별로 군사적 옵션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의 압도적인

14) 더 나아가서 북한이 자신의 핵 능력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미국이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privately) 북한 핵 억제력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Mount and Rapp-Hooper 2020, 41).

재래식 위협하에 서유럽을 방어해야 했던 나토가 군사적 대응 옵션을 희생하면서 확증파괴 전략에만 의존하기 힘들었던 것과는 이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공세적인 대잠작전 능력 배양 등 거부적 억제력 확보에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쌍방 억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응징적 억제력을 보존, 발전시키는 쪽으로 전략의 우선순위를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SLBM 위협이라는 새로운 어려움이 등장했지만 북핵은 억제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핵 억제 문제는 ‘군사력의 균형(balance of military power)’인 동시에 ‘결의의 균형(balance of resolve)’이기도 하다(Jervis 1979/80, 628). 북한 핵 공갈의 위력, 3축 전략의 유효성, 확장억제의 신뢰성 등이 모두 상대와 내가 받아들이는 심리적, 의지적 영역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동하고 있는 대북 억제력의 신뢰성을 스스로 허물면서 새로운 무기로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핵미사일 시대에 상대의 핵 능력을 무력화하거나 완벽하게 방어해 내는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 오히려 그 압박감과 조급함으로 인해 핵 사용의 위험만 높아질 뿐이다. 북핵 문제는 ‘북한 문제’라는 큰 맥락에서 비핵화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때까지 군사력이 감당해야 할 몫은 위기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방책을 자제하는 것, 그리고 응징적 억제에 기초하여 단호하면서도 신중하게 북핵 위협을 관리해 나가는 일일 것이다.

투 고 일: 2020. 10. 19.

심사완료일: 2020. 11. 11.

게 재 일: 2020. 11. 30.

## 참고문헌

- 김보미. 2016. “북한의 핵전력 지휘통제체계와 핵안정성.” 『국가전략』. 제22권 3호. pp. 37-59.
- \_\_\_\_\_. 2019. “북한 SLBM의 실존적 위협 가능성.” 『INSS전략보고』. No. 50. pp. 1-14.
- 김정섭. 2015. “한반도 확장억제의 재조명: 핵우산의 한계와 재래식 억제의 모색.” 제21권 2호. pp. 5-40.
- \_\_\_\_\_. 2017. 『낙엽이 지기 전에: 1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 서울: MID.
- 김태현. 2016. “북한의 핵전략: 적극적 실존억제.” 『국가전략』. 제22권 3호. pp. 5-36.
- 김태형. 2019.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이해: 신현실주의 이론으로 바라본 양국의 핵개발과 안보전략 변화』.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 \_\_\_\_\_. 2020. “파키스탄의 핵 보유 이후 전략 변화.” 김태형 외.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pp. 299-345.
- 문근식. 2015. “북한의 SLBM 사출시험, 그 위협과 대응방안.” 『국방과 기술』. 제436호. pp. 28-29.
- 박재완. 2017. “북한의 핵전략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분석을 통한 한국의 대응 전략.” 『한국군사』. 창간호. pp. 39-74.
- 박휘락. 2016. “북한의 SLBM 개발의 전략적 의미와 대응방향.” 『전략연구』. 제69호. pp. 85-114.
- 반길주. 2020. “게임체인저로서 북한 SLBM 위협고도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변화되는 게임진단과 상쇄전략.” 『국가전략』. 제26권 3호. pp. 119-150.
- 배학영. 2016. “북한 SLBM 상쇄(Offset) 방안: 전력건설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59권, 4호. pp. 79-102.
- 브렌단 그린. 2019. “북한 핵위협과 냉전의 경험: 이동 발사대 추적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근욱 편. 『한국 국방과 미래 육군의 역할』. 서울: 한올아카데미. pp. 70-101.
- 브루스 클링너. 2018.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한미동맹에게 가용한 군사적 옵션은 무엇인가: 가능성과 한계.” 『한국국가전략』. 제6호. pp. 287-306.
- 이근욱. 2018. “고도화되어 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국국가전략』. 제6호. pp. 327-346.
- \_\_\_\_\_. 2020. “핵 보유 이후 국가들의 행동방식 모델 이론.” 김태형 외.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pp. 20-60.

- 이유정·이근욱. 2018. “냉전을 추억하며: 미·소 냉전 시기 경험에서 바라 본 북한의 핵전력.” 『국가전략』. 제24권 3호. pp. 5-29.
- 이윤철·류해성. 2018. “북한 SLBM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해군의 대응방안.” 『국방연구』. 제 61권 2호. pp. 81-105.
- 토마스 셸링 지음. 이경남 옮김. 2013. 『갈등의 전략』. 서울: 한국경제신문.
- 하태영. 2017. “북한 SLBM 위협 증대와 한국군의 대비방향.” 『국방정책연구』. 제33권, 3호. pp. 69-99.
- 함형필. 2009. “북한의 핵전략 구상과 전략적 딜레마 고찰.” 『국방정책연구』. 제25권 2호. pp. 91-120.
- 황지환. 2020. “북한은 핵실험 이후 더 공격적인가?” 김태형 외.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pp. 348-381.
- Brown, Seyom. 2020. “The New Nuclear MADness.” *Survival*. Vol. 61, No. 1. pp. 63-88.
- Bundy, McGeorge. 1969. “To Cap the Volcano.” *Foreign Affairs*. Vol. 48, No. 1. pp. 1-20.
- Campbell, Ian and Dodge, Michaela. 2020. “Deterring North Korea.” *Survival*. Vol. 61, No. 1. pp. 55-59.
- Elleman, Michael. 2019. “North Korea’s New Pukguksong-3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38 North*. October 3. <https://www.38north.org/2019/10/melleman100319/> (검색일: 2020년 9월 10일).
- Feaver, Peter D. 1992/93. “Command and Control in Emerging Nuclear N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7, No. 3. pp. 160-187.
- Freedman, Lawrence. 1981.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New York: St. Martin’s Press.
- Fuhrmann, Matthew. 2018. “When Preventive War Threats Work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41, No. 3. pp. 111-135.
- Green, Brendan R. and Long, Austin. 2017. “The MAD Who Wasn’t There: Soviet Reaction to the Late Cold War Nuclear Balance.” *Security Studies*. Vol. 26, No. 4. pp. 606-641.

- Jackson, Van. 2019. *On the Brink: Trump, Kim, and the Threat of Nuclear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rvis, Robert. 1979/1980. "Why Nuclear Superiority Doesn't Matter."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94, No. 4. pp. 617-633.
- Kaplan, Morton A. 1958. "The Calculus of Nuclear Deterrence." *World Politics*. Vol. 11, No. 1. pp. 20-43.
- Kim, Jina and Warden, John K. 2020. "Limiting North Korea's Coercive Nuclear Leverage." *Survival*. Vol. 61, No. 1. pp. 31-38.
- Kim, Tae-Hyung. 2020.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and Crisis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Lessons, Pitfalls, and Workable Strategy."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Vol. 25, No. 1. pp. 53-73.
- Lewis, Jeffrey. 2010. "Rethinking Extended Deterrence in Northeast Asia." Nautilus Institute workshop, June 15-16. pp. 1-6.
- Lieber, Keir A. and Press, Daryl G. 2017. "The New Era of Counterforce: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Future of Nuclear Deterren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41, No. 4. pp. 9-49.
- Morgan, Patrick. 2004. "North Korea and Nuclear Deter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1. pp. 1-19.
- Mount, Adam. 2019. "Rapid Evolution in DPRK Strategy."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pp. 8-13.
- Mount, Adam and Rapp-Hooper, Mira. 2020. "Nuclear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rvival*. Vol. 61, No. 1. pp. 39-46.
- Narang, Vipin. 2014.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15. "Nuclear Strategies of Emerging Nuclear Powers: North Korea and Iran."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8, No. 1. pp. 73-91.
- Narang, Vipin and Panda, Ankit. 2017. "Thinking Through Nuclear Command and Control in North Korea." *The Diplomat*. September 16. pp. 1-6.
- \_\_\_\_\_. 2020. "North Korea: Risks of Escalation." *Survival*. Vol. 61, No. 1. pp. 47-54.

- Oberdorfer, Don. 1998.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New York: Addison-Wesley.
- O'Neil, Andrew. 2014. "Command without Control? Nuclear Crisis In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n Review*. Vol. 10, No. 1. pp. 7-21.
- \_\_\_\_\_. 2017. "A Rational North Korea Might Still Strike America First." August 18. <https://warontherocks.com/2017/08/a-rational-north-korea-might-still-strike-america-first/> (검색일: 2020년 8월 10일).
- Pape, Robert A. 1996. *Bombing to Win: Air Power and Coercion in War*.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Posen, Barry R. 1991. *Inadvertent Escalation: Conventional War and Nuclear Risk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Roberts, Brad. 2013. "Extended Deterrence and Strategic Stability in Northeast Asia." *NIDS Visiting Scholar Paper Series*. No. 1. 2013. 8. 9. <http://www.nids.go.jp/english/publication/visiting/pdf/01.pdf>. 검색일: 2014. 11. 17.
- Sagan, Scott D. 2017. "The Korean Missile Crisis: Why Deterrence Is Still the Best Option." *Foreign Affairs*. Vol. 96, No. 6. pp. 72-82.
- Schelling, Thomas C. 1966.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 Sechser, Todd and Fuhrmann, Matthew. 2017. *Nuclear Weapons and Coercive Diplom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nyder, Glenn H. 1961. *Deterrence and Defense: Toward a Theory of National Secur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ohlstetter, Albert. 1959. "The Delicate Balance of Terror." *Foreign Affairs*. Vol. 37, No. 2. pp. 211-234.

# Overcoming Military Pessimism and Excessive Deterrence: Re-examination of a Strategy against North Korean SLBM Threat

Jungsup Kim

As North Korea's SLBM capabilities have become more advanced, many are calling for special countermeasures. They say that the SLBM is a "game changer" that can undermine the existing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and bring about a rift in the U.S.-ROK alliance itself.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offensive operational concepts and the ground breaking buildup of anti-submarine warfare capabilities are being emphasized. This paper attempts to revisit the evaluation of SLBM threats and the presentation of alternatives in these existing studies. This is to point out that the existing SLBM threat assessment is too pessimistic and that the response strategy is excessive. This is because excessive military pessimism can undermine the credibility of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on our own, and an offensive response could lead to unintended side effects. Re-examining existing research will take place in three dimensions. First, the question of incapacitation of the existing three-axis strategy, second, the credi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and third, the appropriateness of introducing offensive operational concepts. Through this analysis, the paper will propose a 'deterrence by punishment' as the best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Controlling crisis instability is a key to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t should be noted that deterrence based on threat of retaliation is the most realistic and stable strategy in that regard.

**Keywords:** SLBM, Game-Changer, Extended Deterrence, KAMD, Kill Chain, North Korea's Nuclear Threat

